

2015 한국금융학회 특별정책심포지엄

「위기의 한국금융,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정부와 금융’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김상조(한성대 교수)

다음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토론하고자 함.

1. 무엇이 문제인가

- 오늘 발표된 세 논문을 보면, ‘한국금융이 위기다’라는 점에서만 일치할 뿐, 진단과 대안은 상당한 정도 차별성이 있음. 그 이유는?
 - 복잡한 문제이고, 이론적 근거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진단과 대안이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일 수도. 우리 내부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
- 외국인들은 한국 금융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은 TIP market(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팀장을 senior에서 junior로 교체. 이유는?
 - 첫째, 예측가능성 결핍 - ‘내일을 알 수 없다.’
 - 둘째, 판단과 결정의 주체 불분명 - 극도의 보신주의
 - 외국인들은 오늘 심포지엄의 주요 논점인 은산분리 규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음.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음. 외국인들의 관심은, 어떤 내용의 것이든 간에, 한국이 이를 일관성 있게 설계·집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있음. 결론은 극히 부정적.
- 우리는 문제(현재)와 목표(미래)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변화의 과정(process)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이래서는 실패를 반복할 뿐. 우리의 능력과 환경에 맞는 현실적 목표를 세우고, 개혁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와 금융

- 본 토론자 역시 세 논문의 주요 논지, 즉 한국금융의 위기의 주요 원인은 관치에 있으며, 민간금융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세 논문이 기대하는 바대로 잘 될 것 같지는 않음. 이유는?
 - 첫째, 이 심포지엄의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결국 정치가 문제임.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세력은 단기성파에 집착할 수밖에 없음. 보수·보수 모두 마찬가지임. 정치적 목적의 개입은 근절하고, 건전성 감독 등의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자는 세 논문의 주장에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둘째, 2008년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환경, 즉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New

Normal의 시대적 환경 하에서 변화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었음.

- 한편, 정부의 관치 개입을 근절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임.
 - 정부보다 낫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역량은 대단히 미흡. 이를 배양하는 데에도 10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정부의 후퇴와 민간의 전진 사이에 놓인 과도기적 불안정성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990년대 중반 YS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음.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오늘 윤석헌 교수님의 발표 중에 ‘big-bang 개혁을 통한 bottom-up 질서의 확립’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모순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 big-bang은 그 특성상 top-down이 될 수밖에 없는데, top-down 방식으로 bottom-up 질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임.
 - 1990년대 체제전환경제를 대상으로 한 제도경제학과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big-bang 전략(러시아)보다는 만만디 전략(중국)이 훨씬 안전하고 유효할 것임.
 - 대다수 시장참여자 및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현실적 과제부터 추진함으로써 그 개혁의 효과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 예를 들자면,
 - 이사회 중심의 CEO 승계프로그램 마련 및 정착
 - 한국판 Stewardship Code의 제정 및 발전
 - 기촉법 등 채권단 주도 부실기업 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투명성 제고